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복거일 소설가

지금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싱가포르의 미북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담에 관한 글은 쓰기도 어렵지만 시효가 나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대신 과거를 돌아보는 글을 씁니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은 모두 놀랄 만큼 거족적이었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리들과 일본 사회도 놀랐지만, 시위에 참가한 조선 사람들 자신들도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로선 이처럼 거센 독립운동의 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의 중심인 미국에 알려져 미국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이 긴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스스로 돕는 길

승만에게 상해·파리·호놀룰루 등지에서 전보들이 답지했습니다. 총독부의 잔인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4월에 시위가 이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전보들을 들고 주요 신문들을 찾았지만, 기사를 실어 주는 신문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많은 자금을 들여서 미국의 언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팽창을 막아내는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미국 여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승만은 통신사 INS의 젊은 기자인 제이 제롬 윌리엄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승만이 자신을 소개하고 전보 두 통을 꺼내 놓자, 윌리엄스는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기사가 여러 신문들에 실렸습니다. 그 뒤로 이승만은 그런 전보들이 들어오면 윌리엄스를 찾았고, 조선의 시위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덕분에 이미 '죽은 논점'(dead issue)이 되어 버린 조선 독립이 작게나마 되살아났습

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자신이 초대 대통령에 뽑히자, 이승만은 본격적으로 외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1차대전에서 이긴 나라들에 속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지도에서 사라진 조선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부활할 가망은 누구에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부활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조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의 존재가 잊히면, 상황이 크게 바뀌어도 행운이 찾아올 길이 막힌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이 잊혀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요즘은 말로 치면 '소음 광고'(noise marketing)를 한 셈이죠.

이승만은 행운이 찾아올 길도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해외 팽창은 일본 사회의 특질에서 나왔으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끝내는 미국과 충돌해서 패망하리라고 전

망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패망한 상황에서 그는 조선이 독립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조선이 잊히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예측이 정확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길은 행운이 작용할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바탕, 그마저도 없으면 하늘도 행운을 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빠진 싱가포르 회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행운이 작용할 작은 바탕이라도 마련했는가?' 그리고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행운이 작용할 바탕을 마련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난에 실리는 저의 마지막 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교칼럼



조진무 피아골피정집 관장 신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야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수많은 과정을 거칠 것이고, 결코 적지 않은 고통과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만남, 대화, 결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평화와 안녕을 위한 중요한 선택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있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만남과 대화'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부디 각국의 모든 구체적인 국민과 시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일련의 만남과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염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른바 '세기의 만남'이라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일상의 만남'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국 정상들의 만남과 대화에 잘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간 그리고 북

미간 정상 회담들의 원탁에서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농단을 씻어내며 적폐 청산을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또 '미투 운동', '블랙리스트 파동', 또한 최근의 '사법농단' 소식을 접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제반 영역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인식하고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지난 촛불 집회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때만 우리 시민을 '주인공'으로 대우하고 당선 후에는 지나가는 '객'으로 보는 그런 후보자를 뽑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당이나 공약의 어불리(利不利)를 떠나서 말합니다.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신도들을 신앙 생활의 구체적인 '주인공'으로 보지 않고 제도적 종교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희생과 의무만을 강요한다면 이미 종교적 정도(正道)를 벗어난 것이며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모든 일에 있

어서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聖月)'로 지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聖心)을 묵상하는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를 통해 인간 모두를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다고 신앙하며 기도하는 중요한 신심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신다는 '구원의 보편성'은 국적이냐 인종, 종교나 문화, 각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따지지 않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당신의 품안으로 품어주신다는 믿음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시고, 늘 우리 모두를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6월에는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의 정상 회담을 통한 변화와 6·13 지방선거를 통한 변화, 그리고 지속되는 적폐 청산 과정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환흥 앞당기는,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Hic et Nunc)에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루카 11.2) 되도록 기도합니다.

社說

투표율 저조 우려...유권자들 적극 참여를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작 50~60%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치러진 선거(대통령·국회의원·지방) 중 지방선거는 유난히 투표율이 낮았다. 광주 지역도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2회부터 5회까지는 줄곧 50%를 밑돌았다. 다만 6회 때인 2014년에는 57.1%로 상승했는데 이는 사전투표제 도입 덕분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관심이 낮은 데다 선거 하루 전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선거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 바로 다음 날인 6월14일에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악재다. 실제로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3회 때는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8.9%에 불과했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정책선거 대신 후보 간 비방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외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다양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각 정당과 후보들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프라인을 통한 이색 선거전은 물론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관심만이 투표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일단 사전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 일꾼은 내 손으로 뽑는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향후 4년의 지역 정책과 경제 문제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심의 허파 그린벨트 훼손 단속 강화해야

무단으로 나무를 베거나 숲에 길을 내는 것도 모자라 축사까지 짓는 등 광주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 적치와 쓰레기 투기, 산림 파괴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탓에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소태동 인근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토지 소유주를 주민 신고로 적발했다. 이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산에서 무단 벌목 후 산 일부를 깎아 인도를 개설했는 뿐만 아니라 닭 사육용 축사와 주차장까지 만들었다. 동구는 원상 복구 명령을 지시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복구장동등 산림에 공사용 흙을 쌓아 놓은 토지소유주, 문흥동 그린벨트 구역에 창

고를 무단으로 지은 주민도 구청에 적발됐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매년 분기별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지만 인력만으로 사실상 민원이나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30건 정도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그린벨트 훼손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하겠다.

현대 도시의 환경 정책은 도심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법에 의해 개발하는 민간공원마저도 개발 면적을 최소화해 도심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단속 인력을 보강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無等鼓

대한민국 헌법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 등이다.

공인인 국회의원과 법관의 경우, 인간으로서 양심과 함께 직업적 양심이 요구된다. 법관의 양심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 사실상 판결 결과가 당사자에 대한 생사여탈을 좌지우

사법부의 양심

지하기 때문이다. 사법상 법원의 양심에 가장 큰 생체기를 남긴 사건으로는 인혁당(인민혁명당) 판결이 꼽힌다.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간첩 사건이 이 판결로, 도예종 등 관련자 여덟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군사 정권에 굴복한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이들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불과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군 검찰부가 사형 선고 통지서가 도착했으나, 이른바 '사법살인'인 셈이다. 대한민국에 진보무쌍 씨앗

을 뿌린 조봉암 선생도 이승만 정권이 날조한 간첩죄를 뒤집어쓴 채 사형을 피할 수 없었다. 비록 판사들도 오금을 펴기 어려웠던 독재 시절이었지만 판관들이 양심을 정권에 위탁했기 때문에 내려진 판례라 하겠다.

요즘 사법부가 벌집을 쭈서 놓은 것처럼 시끄럽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혹을 낳고 있는 주요 사건은 KTX 승무원 해고무효 소

송 등 모두 15개인데, 대법원은 대부분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일부 사안은 청와대의 의중

을 따르거나 교감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행정처 기록이 발견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을 비롯한 전국 판사들이 연일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대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양심을 지키는 대다수 판사들까지 매도당하는 등 사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기고



김정희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당신의 투표는 역사가 된다

이 지방 자치인데, 지방 선거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대표자를 뽑는 생활 선거요, 동네 선거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투표 용지는 총 7장(보궐 선거 지역은 8장)이다.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광주시장·전남지사),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광역 의원(도의원·시의원), 기초 의원(구의원·시의원·군의원), 정당에 기표하는 비례대표 의원까지. 그런데 그들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유권자가 많다.

국회의원이 나라 전체의 법과 예산을 다룬다면 지방 의원은 내가 사는 지역의 법(조례)과 예산을 처리한다. 지방 의원 한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평균 예산이 523억 원 정도라는데 허투루 뽑아서야 될 일인가. 교육계의 대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일 것이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국가 정책이 아니다. 내 집 앞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출근 길에 지나게 되는 파손된 도로를 수리해 주고, 내 아이가 자 전거를 타는 공원을 보수해 주는 등 이

루 다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일상을 책임져주는 내 지역 민원의 해결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 의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 간접 자본(SOC) 사업이나 국회 의원급 공약을 내세운 지방 의원 선거 후보자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 선거 운동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집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울마이어'라는 영화에서 신이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었더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대사가 나온다. 지역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미담이 인용되었던 한 재벌 회장이 있다. 하지만 그 분이라고 모든 게 완벽했을까? 흥보다 청안이 많은 것은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인 데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같이 싫다면, 그나마 덜 싫은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이다.

당선만 되면 유권자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무서하고 자기 멋대로 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찍겠다는 유권자가 많다. 최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는 게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시간이 없어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말자. 투표할 수 있는 날은 모두 사흘이다. 6월 8일과 9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76세 노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 분은 지난 지방선거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읽다가 흘러간 세월의 기억들이 새록새록해 감격스러웠다고 표현하셨다.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다. 부디 나의 미래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말자. 6월의 따뜻한 햇살, 어린아이의 눈동자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질 그날, 당신의 투표는 역사가 될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주)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